

직장인 10명 중 1.5명 폭행·폭언 피해

“1~11월 제보 중 폭행 피해 65건 확인” “피해자 도움 요청 없으면 해결 어려워”

“사업주가 일하다 제 실수를 발견하면 ‘남 밑에서 일하는 놈’ 등의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직장인 10명 중 1.5명은 폭행·폭언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4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15.3%가 폭행·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폭행·폭언 피해는 사무직(14.8%), 생산직(17.2%), 서비스직(15.2%) 등 직업군을 가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단체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신원이 확인된 폭행·폭언 이메일 제보 516건 중 직접적인 물리적 행사가 동반된 폭행 피해 사례는 총 65건(12.5%)이라며 한 달 평균 6건 내외의 폭행 피해 상담이 단체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단체는 폭행 유형에 ‘때리기’뿐 아니라, ‘던지기·휘두르기’ ‘신고 후 보복’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급·경력·고용형태·기준 구성원들과의 관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체는 “일터에서 폭행당했을 때는 증거 확보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사건 발생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사용자가 폭행 가해자일 때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위반으로 징정서와 고소장을 모두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일터에서 폭행을 저지르거나 방치하는 회사가 다른 괴롭힘을 예방하고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리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폭행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폭행)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조사해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선욱기자



순천경찰, 외국인 유학생 자물방범대 정성치안 활동

순천경찰서는 지난 7일 순천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주축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안전을 위한 가시적 순찰활동을 실시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담양경찰, 주민참여 정성치안 간담회 개최

담양경찰서는 지난 8일 “담양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각 과·계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 정성치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진도경찰, ‘마을 담당 경찰관 활동’ 실시

진도경찰서는 최근 실시된 마을별 담당 경찰관 활동의 일환으로 진도 남동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을 만나 최근 많이 발생하는 전화금융사기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진도=조성용기자



고흥경찰, 동강면 이장단 회의 참석해 보이스피싱 등 예방 홍보

고흥경찰서는 동강파출소에서는 지난 7일 오전 10시 동강면사무소에서 개최된 이장단 회의에서 연발연시 읍주운전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고흥=기동채본부



구례소방,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십시오”

구례소방서는 최근 겨울철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주민들을 만나 당부했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광주 동부소방, 순천도로 터널 내 사고대응 합동소방훈련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는 동계기 대비 터널 내 다중충돌 교통사고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터널에서 차량화재를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7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올해 임금체불 1조4500억원...대검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9월 이후 9명 구속영장 청구, 5명 구속 수사

올해 10월까지 임금 체불액이 약 1조4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45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30억원) 대비 3570억원(32.7%)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이 1조3472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미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었다.

임금 등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수단과 직결된 문제다. 그런만큼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대검찰청은 추석을 앞둔 올해 9월5일과 9월14일에도 전국 검찰청에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9월 이후 최근 3개월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5명을 구속했다.

특히 약 14개월 동안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속적으로 체불했고, 충분한 변제기간에도 불구하고 변제 약속을 수차례 지키지 않은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지난 10월 구속 기소하는 성과도 올렸다. 해당 업체 대표이사는 412명의 임금 등 합계 302억원을 체불하고, 수회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에는 노동청과 협력해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업주를 적발해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악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금액 다과를 불문하고 엄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 “임금 체불의 경우 신속히 체불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근로자의 생활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며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야간·휴일·출장(현장) 형사조정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유나기자



‘알 수 없는 계절’

주말 휴일동안 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웃도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인 10일 오후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이 맨발로 해변을 걸어가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11일까지 제주도에 최대 1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며 기상이 악화할 것으로 예보됐다.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15시간 조사...혐의 전면 부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약 15시간에 이르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유 사무총장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감사는 적법 절차에 따른 정당 행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 검사 이대환)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1시까지 약 15시간에 걸쳐(휴식·조식 열람 시간 포함)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날 오전 9시51분께 공수처에 출석한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에서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는데 불응한 이유에 대해 여러 비판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거야 (소환)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 불응이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질문에는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A4용지로 36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조사를 이어갔다.

유 사무총장은 기존 임장과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또 상당수 질문에 의견서, 진술서 제출로 갈음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1시8분께 공수처 청사를 나서며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서도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설명드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표적 감사했다”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소명했는지, “공수처에서 제시한 증거는 어떤 게 있었는지”, “추가 소환 요청받았는지” 등 질문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제출한 의견서나 진술서, 피의자 조사결과 등을 검토한 후 재소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년 1월 공수처 지휘부 퇴임 등 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수사에 변함없이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특별감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형·공개했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이번 주 첫 재판



프로포폴과 대마 등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오는 12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1명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이다. 따라서 기소 이후 처음으로 유씨가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

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32)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유씨와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당시 “본인(유씨)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김모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뉴시스